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 금융분야의 변화 : 중미 관계에 대한 영향을 중심으로

---

서봉교  
동덕여자대학교


2012년 7월

## 보다 나은 세상을 향한 지식 네트워크

---

동아시아연구원(The East Asia Institute: EAI)은  
2002년 5월 설립된 민간 연구기관입니다.  
EAI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개방된 사회를 발전시킴으로써 평화로운 국제 사회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연구를 통한 정책 제안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EAI는 정책 이슈에 관하여  
어떠한 정파적 이해와도 무관한 독립 연구기관입니다.  
EAI가 발행하는 보고서와 저널 및 단행본에 실린 주장과 의견은  
EAI와는 무관하며 오로지 저자 개인의 견해를 밝힙니다.

 EAI는 등록된 고유의 트레이드마크입니다.

© 2012 EAI

EAI에서 발행되는 전자출판물은  
오로지 비영리적 목적을 위해서만 제공됩니다.  
또한 내용의 수정을 허용하지 않으며  
온전한 형태로 사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어떠한 상업적 목적을 위한 복사와 출판은 엄격히 금지합니다.  
EAI 웹사이트가 아닌 다른 곳에 본 출판물을 게시할 시에는  
사전에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AI의 모든 출판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 받습니다.

재단법인 동아시아연구원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58, 909호 (을지로4가, 삼풍빌딩)  
Tel. 02 2277 1683  
Fax 02 2277 1684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 금융분야의 변화 중미 관계에 대한 영향을 중심으로

서봉교  
동덕여자대학교

### I. 서론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에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 중국은 기존과는 달라진 국내외 정치-경제 환경에 직면하였다. 위기 이전 중국은 수출주도형 경제성장 방식을 채택하면서 안정적이면서도 높은 경제성장을 지속할 수 있었지만, 이런 성장을 가능하게 만든 원동력이었던 “글로벌 불균형”이 지속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위기 이후의 달라진 세계경제 환경에서 특히, 미국과 중국의 경제관계 변화는 전세계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할 때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금융위기 이후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위기를 극복하면서 세계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고, 미국의 역할 축소와 중국의 역할 확대는 전세계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가 되었다. 향후 두 나라의 경제관계가 어떤 형태로 변화 발전할 것인가는 세계 경제질서의 재편에 결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경제관계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한편으로는 보다 긴밀해지고 경제적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으면서도, 때로는 그와 반대로 위안화 문제 등에서 갈등관계가 심화되는 모습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향후의 변화 방향성을 전망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 글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관계 중에서도 특히 금융분야를 중심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양국의 변화된 경제환경과 이에 대응하여 실시한 경제정책을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의 변화 방향성을 전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금융분야를 크게 외환이나 통화정책 등의 거시금융 분야와 금융사들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미시금융 분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렇게 거시적인 측면과 미시적인 측면을 나누어 살펴보는 것은 중국과 미국이 표면적으로 갈등 또는 대립 관계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내부적으로 협력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거나 혹은 그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해석 및 전망을 제시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 II. 거시적 측면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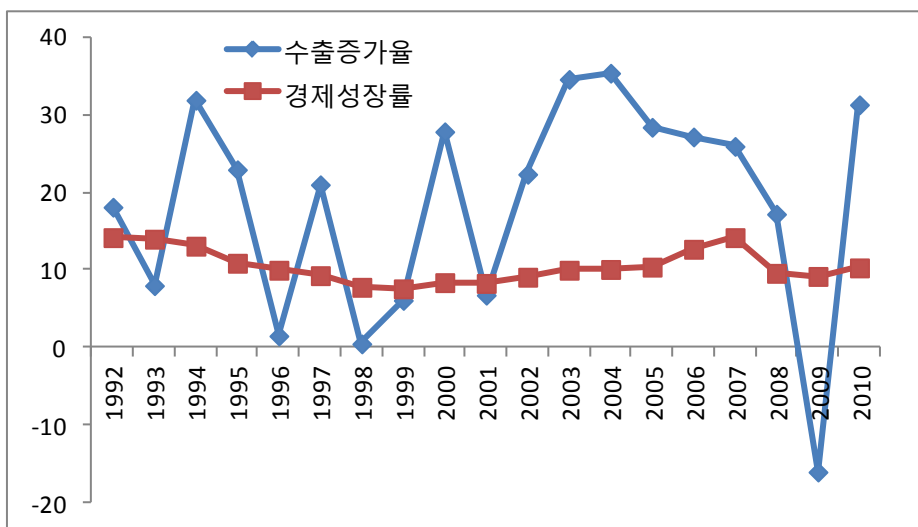
#### 1. 금융위기와 글로벌 불균형과의 관계

위기 이전 중국의 경제성장 모델은 기본적으로 “수출주도형 성장”모델이었다. 중국정부는 풍부한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 토지가격 등의 생산요소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게 책정하였고 환율



등의 정책도 수출에 유리하도록 추진하면서 수출주도형 성장 모델을 추구하였다. 80년대 말의 천안문 사태로 인해 극도로 침체되었던 국내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90년대 들면서 국제분업 시스템에 적극적으로 편입하였고 수출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였다(스타인펠드 2011).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공식적인 위안화 환율의 대폭적인 평가절하를 동반한 단일환율 제도로의 개혁이 1994년에 단행되었고,<sup>1</sup> 중국을 제조업 생산기지로 활용하려는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각종 제도개혁이 추진되었다. 특히 2001년 WTO 가입 이후 중국의 수출은 경제성장률을 훨씬 웃도는 속도로 빠르게 증가하면서 중국의 성장을 견인하였다. 수출의 성장기여도는 2000년대 들면서 20%로 높아지기도 하였다.<sup>2</sup>

[그림1] 중국의 성장률과 수출 증가율 추이 (단위 %)



자료 : 통계연감

중국의 수출에서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으로의 수출 비중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전체 수출 중 미국에 대한 수출은 20%에 달하고 있고 홍콩(15% 수준)에 대한 수출 중 상당부분도 미국과 유럽으로 재수출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선진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는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다. 이렇게 선진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이유는 90년대 이래 “글로벌 불균형”의 균형이라는 국제경제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중국은 저임금의 노동력과 저평가된 위안화 환율을 바탕으로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으로 수출을 확대할 수 있었고, 미국과의 무역흑자를 통해 대량의 달러를 확보하였다. 반면 미국은 저렴한 메이드인 차이나 제품으로 물가상승을 억제할 수 있었고, 중국이 미국의 국채를 지속적으로 매입하였기 때문에 확장적인 재정정책으로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러한 중국의 수출주도형 성장모델은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다. 주요 수출 대상국인 미국과 유럽 시장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심각한 경기침체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sup>3</sup> 이에 따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수출은 급감하였고<sup>4</sup> 2009년에는 순수출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40.6%로 떨어지기도 하였다. 또한 글로벌 불균형을 가능하게 했던 달러 리사이클링(還流) 구조(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로 유출된 달러가 경상수지 흑자국의 미국 금융자산 투자로 다시 미국으로 유입되는 구조)가 미국경제에 대한 해외투자자의 신뢰가 약화되면서 지속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였다.<sup>5</sup>



[표1] 세계 주요국의 국내총생산(GDP)와 수출의존도

	GDP, 10억 달러 (2007년)	수출의존도, % (2007년)	GDP, 10억 달러 (2008년)	수출의존도, % (2008년)
미국	13807	8.4	14265	9.1
일본	4380	16.0	4909	16.0
중국	3382	36.0	4327	33.0
독일	3315	39.9	3643	40.2
프랑스	2592	21.2	2852	21.2
영국	2801	15.5	2653	17.3
한국	1049	35.4	929	45.4

자료 : KOSIS

## 2. 위기 직후 중미 거시금융 분야의 협조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거시금융 분야에서 중국과 미국은 당면한 위기 극복을 위해 상당한 수준으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보이는데 하나는 글로벌 차원의 경기부양정책에 동조한 확장적 통화정책을 실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위안화 환율 절상속도를 조정하는 것이다.

금융위기 직후 글로벌 신용경색을 완화하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전세계적인 확장적 통화정책이 실시될 때 중국 역시 확장적 통화정책과 대규모 경기부양정책을 실시하였다. 이는 중국이 기존에 추진하던 긴축적 통화정책의 방향을 전면적으로 재조정하는 것이었다. 중국은 2006년 이래 경기과열과 물가상승을 억제한다는 쌍방(雙防)정책을 채택하였고 2006년부터 예금과 대출금리를 빠르게 높이기 시작하였다. 예금금리의 경우 2.25%에서 2007년 12월 4.14%로 상향조정하였다. 이는 2006년과 2007년의 경제성장률이 각각 12.7%와 14.2%로 과열 양상을 보였고, 소비자물가상승률도 4%대로 높아지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위기가 본격화된 2008년 7월에는 경제정책 기조를 성장유지와 물가억제(一保一控)로 2008년 10월에는 다시 성장유지로 정책기조가 변화되었다. 2008년 11월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재정정책을 온건에서 적극적으로, 통화정책을 총체적 긴축에서 “적절한 느슨함”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였다(이장규 외 2010). 이에 따라 은행금리를 하향조정하기 시작하였고, 2008년 12월에는 다시 2006년 이전 수준인 2.25%까지 인하하였다. 이자율 조정 이외에도 대규모 내수확대를 위한 경기부양 정책<sup>6</sup>이 추진되었고, 통화량(M2)도 빠르게 늘어났다.<sup>7</sup>

[표 2] 중국의 금리 변화 추이 (단위 %)

시기	예금금리	대출금리
2004.10.29	2.25	5.58
2006.04.28	2.25	5.85



2006.08.19	2.52	6.12
2007.3.17	2.79	6.39
2007.5.19	3.06	6.57
2007.7.21	3.33	6.84
2007.8.22	3.6	7.02
2007.9.15	3.87	7.29
2007.12.21	4.14	7.47
2008.09.16		7.20
2008.10.09	3.87	6.93
2008.10.30	3.60	6.66
2008.11.27	2.52	5.58
2008.12.23	2.25	5.31
2010.10.20	2.50	5.56
2010.12.26	2.75	5.81
2011.2.9	3.00	6.06
2011.4.6	3.25	6.31
2011.7.7	3.50	6.56

자료 : 중국인민은행

한편 중국은 이러한 국내의 확장적 통화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008년 중반부터 2010년 중반까지 2년간 달러당 위안화 환율을 6.83위안 수준에서 사실상 고정환율로 운영하였다. 이는 중국이 2000년대 이후 무역수지 흑자가 지속되면서 위안화 절상압력이 강화되자 2005년 환율제도를 관리변동환율제도로 개혁하면서 점진적으로 위안화 절상이 진행하여 왔던 추세와는 달라진 것이다. 2008년 이래 중국이 위안화 환율의 절상을 중단했던 가장 큰 이유는 금융위기 이후 수출이 급감 하면서 중소형 수출기업들이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융위기라는 특수 상황에서 중국과 미국이 전세계적인 경기부양을 통한 위기극복을 위해 상호 공조가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안화 환율의 절상을 상당기간 중단하는 것이 가능하였다.<sup>8</sup>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가 다소 진정되면서 2009년 이후 위안화 환율의 절상문제는 미국과 중국이 거시금융 분야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로 부상하였다.

### 3. 위기 진정 이후 중미 거시금융 분야의 갈등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위기 극복을 위해 단기적으로 공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중국과 미국은 위기가 진정 국면에 접어든 2009년 하반기 이후 다시 심각한 갈등과 대립의 양상을 보였다. 특히 2010년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경제문제가 선거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면서 양국의 갈등은 더욱 격화되었다. 양국의 표면적인 가장 중요한 갈등은 위안화 환율의 문제이다. 미국은 중국 정부에게 인위적으로 저평가된 위안화 환율을 대폭적으로 절상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중국은 이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의회와 정부 차원에서 중국 정부에 대해서 환율 조작국 지정이나 상계관세 부과 등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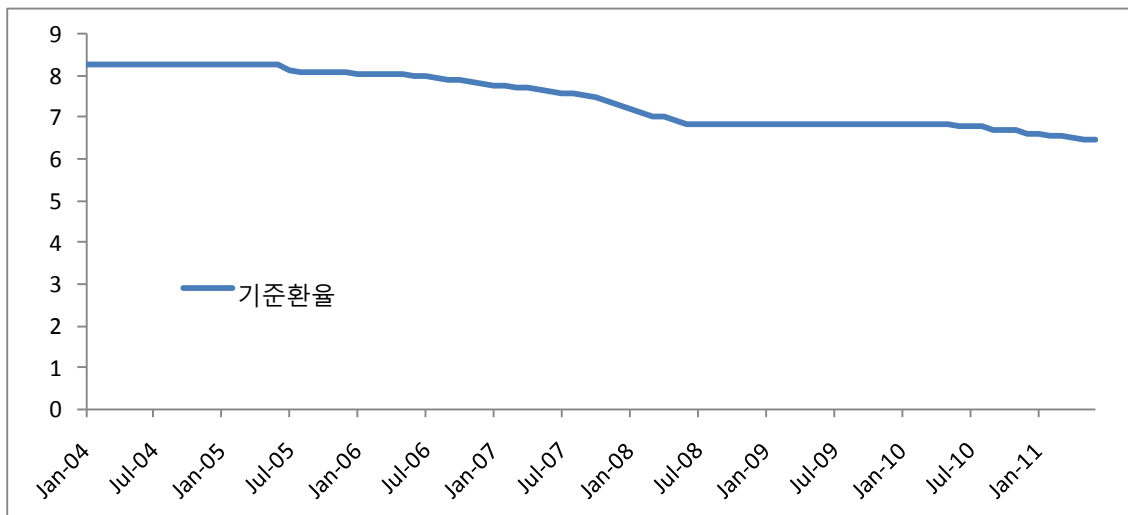




압력을 수차례에 걸쳐 진행하였고, 중국정부는 이에 반발하고 있다. 예를 들면 2010년 9월에는 미국 하원이 환율 조작국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공정무역을 위한 환율개혁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러한 조치는 중국정부의 강력한 반발로 이어져 2010년 9월 중국은 미국산 닭고기에 대해 5년간 최대 105%에 달하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고, 이에 미국은 다시 중국산 동파이프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등 양국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전세계를 긴장시키기도 하였다. 물론 이러한 무역분야의 양국의 갈등이 그 이전에도 존재하였고 위안화 환율이 가장 중요한 갈등 요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표면적으로 양국의 갈등은 위안화 환율의 절상 분야에서 가장 첨예하게 부각되는 것은 사실이다.

다행히 양국의 대립은 극단으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중국정부도 2010년 하반기부터 위안화 환율을 다시 점진적으로 절상하기 시작하였다. [그림2]에서 보듯이 중국 위안화의 환율은 2010년 중반부터 점진적으로 절상되기 시작하였다.

[그림2] 위안화의 달러대비 환율 추이



자료 : 중국통계연감;

하지만 중국의 위안화 환율 절상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갈등은 쉽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위안화 절상 속도가 미흡하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위안화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다. 2011년 10월에는 미국 상원에서 위안화 절상을 압박하는 환율법이 통과되기도 하였다.

이런 미국 측의 압력에 대해 중국정부는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미국 국채 매입의 축소와 위안화 국제화의 추진이라는 두 가지 카드로 미국을 견제하고 있다. 중국은 전세계에서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매입하고 있는 나라이며, 2000년대 들어 미국 국채 보유량은 크게 증가하였다. 2000년 603억 달러에 불과했던 미 국채 보유액은 2011년 8월말까지 1조1300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이 환율전쟁으로 갈등이 고조되었던 2010년 6월이나 2011년 초, 2011년 8월 등에 미국 국채를 대량 매도하는 등 간접적으로 미국을 압박하는 모습을 보인다.<sup>9</sup>

또 하나의 카드는 국제통화 질서 재편과 위안화 국제화의 추진이다.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로 기축통화로서의 미국 달러의 위상이 약화되기 시작하면서, 2009년 3월 중국인민은행 총재는 어느 특정국가의 통화가 아닌 특별인출권(Special Drawing Rights: SDR)을 초국가적 준비통화로 채택



하자고 제안하였다. SDR을 초국가단위의 기축통화로 도입하자는 제안의 현실성이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이를 주장하고 있는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미국책임론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축통화로서의 달러에 대한 회의론을 제기함으로써 국제금융계에서 중국의 영향력과 발언권을 확대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평가된다(조종화 외 2010).

동시에 중국은 동아시아 지역내 위안화를 역내 결제통화로 사용하는 등 위안화 국제화의 움직임을 확대하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내 통화스와프 계약 증가, 위안화 채권발행, 위안화 결제 및 개인의 위안화 송금 확대 등은 국제사회에서 위안화의 위상을 제고하면서 미국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표3] 위안화 국제화 추진과정

시기	주요내용
2009.3월	위안화 국제화 정책 공식추진(전인대)
2009.7월	위안화 국제화 시범 실시 상하이, 광둥성(4개도시)↔아세안(홍콩,마카오)
2010.2월	위안화 채권 발행 허용(홍콩)
2010.6월	위안화 무역결제 해외 대상지역 제한 철폐 베이징, 상하이 등 20개 성·시↔전세계
2010.8월	위안화 펀드 허용(홍콩) 중국내 은행간 채권 시장 선별적 개방

자료 : 한국은행 해외조사월보(2010)

#### 4. 중미 거시금융 갈등의 전망

이러한 거시금융 분야에서의 중국과 미국 양국의 갈등이 향후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인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양국의 갈등 중에서 미국이 중국에게 대규모의 위안화 절상을 요구하는 것이나, 중국이 미국 달러화를 대체하는 새로운 기축통화의 도입을 제시하는 것들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문제로 이 문제의 해결 전망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양국이 표면적으로 중요한 갈등요인으로 주장하는 것과 실제로 원하는 내용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그리고 양국 모두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전개되는 것 보다는 서로가 협력을 통해 보다 나은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향후 전망을 제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환율문제에서 중국은 현 단계에서 대폭적인 위안화 절상을 수용할 수는 없으나 점진적인 위안화 절상은 수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환율의 유연성 확대 방침은 중국 정부가 이미 수차례 언급한 바 있다. 다만 과거 일본 엔화의 대폭적인 절상을 가져왔던 <플라자 합의> 이후에 일본 경제가 겪





있던 어려움에 비추어 볼 때 점진적인 위안화 환율 조정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양보할 것으로 보이는 않는다. 반면 미국은 중국에 대해 대폭적인 위안화 절상을 압박하면서 미국 내 여론에서 정치적인 이득을 취하고, 중국에서 다른 경제적 양보를 얻어내는 실리를 추구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다음 장에서 다룰 중국 금융시장의 개방 확대는 미국이 금융분야에서 가장 실질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한편 위안화 국제화의 문제에서 중국은 현 단계에서 전면적인 위안화 국제화를 추구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무엇보다도 자본시장 개방이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면적인 위안화 국제화 추진은 중국내 금융시장의 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sup>10</sup> 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국제통화 발행국은 국제적 유동성 공급과 기축통화의 신뢰성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중국 경제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대신 미국 달러화의 기축통화로서의 지위 약화를 계속적으로 언급하면서 미국을 압박하고, 동아시아 지역 내의 위안화 영향력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미국 국제 채 매각도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유리한 상황이다. 중국은 전세계에서 외환보유고로 달러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로서도 대량으로 미국 국채를 매각할 경우 달러화의 가치 하락으로 인해 외환보유 자산의 심각한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보다는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무역결제 확대 등의 부분적인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하는 실리를 추구할 것으로 판단된다.<sup>11</sup>

〈표 4〉 위안화 국제화의 이점과 위험

이점	위험
시뇨리지 효과(Seigniorage effect) 자산 가치의 보존 가능 편의성과 특권	위안화 평가 절상 압력 국내 통화 및 거시정책 제약 자본 및 금융시장 개방

마지막으로 통화정책에서 중국은 최근 경제성장이 안정화되면서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빨리 물가안정을 위해 통화정책을 긴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sup>12</sup>, 최근 2011년 8월 물가상승세도 다소 진정국면에 접어드는 등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전세계 경제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공조가 다시 절실횰진다면 중국이 확장적 통화정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정책 공조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한다고 볼 수 있다.<sup>13</sup>

### III. 미시적 측면의 변화

#### 1. 중국 금융시장의 부분적인 개방

이 장에서는 미시금융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를 살펴 보고자 한다. 이는 거시금융 분야에서 표면적으로 양국이 갈등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도 내면적으로는 금융시장 개방분야에서 양보와 타협을 하고 있거나, 혹은 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WTO 가입 조건으로 국내 금융시장을 개방하기로 약속하였다. 중국의 금융서비스 시



장 개방은 2001년 말 WTO 가입 당시 약속하였던 단계적인 금융시장 개방 계획<sup>14</sup>을 넘어서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고, 2006년 12월 WTO 가입 당시 설정되었던 금융시장 개방의 유예기간이 완료된 현지점에서 중국은 당초 약속했던 시장 개방수준은 달성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 내 영업지역, 위안화업무, 지점설립 등에 대한 외국계 금융기관의 제약은 기본적으로 철폐되었다. 하지만 금융산업별로 현지법인 설립이나 중국 금융사의 지분인수에 대한 제약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위안화 업무의 경우도 일부 업무에서는 중국계 금융사와는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외국금융사의 현지법인 설립의 경우 은행과 손해보험은 100%, 외국자본의 현지법인 설립이 가능한 반면 생명보험은 50%, 자산운용사는 49%, 증권사는 33%로 외국인 지분이 제한되어 있다. 중국계 금융사의 지분인수도 은행은 25%(단일외국인 한도 20%), 보험사는 25%, 자산운용사는 49%로 제한되어 있다. 위안화 업무도 은행의 경우 소매업무를 단계적으로 허용해주고 있고, 손해보험의 경우 자동차 보험의 3자 책임보험은 제한하고 있는 등 업무 영역별로 부분적인 제한이 존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은 중국 금융시장의 추가적인 개방과 각종 규제 철폐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며, 중미 경제전략회의 등에서 금융시장 개방은 매우 중요한 의제로 논의되어 왔다. 하지만 중국은 자국 금융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시장개방 원칙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중국정부는 개방과 규제완화의 속도를 두고 의견 대립은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개방확대를 통해 중국 금융산업의 발전을 추진한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었다. 이에 따라 지난 수년간의 개방 성과도 나쁘지 않았다.

## 2. 위기 직후 중국 금융시장 개방정책의 변화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 금융시장 개방의 상황은 급변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흡한 금융규제 및 금융감독이 금융위기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금융규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이 전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1980년대 이후 금융분야에서 진행되었던 규제완화와 금융혁신<sup>15</sup> 등의 글로벌 금융환경의 변화 추세와는 다른 양상이었다.<sup>16</sup>

이런 움직임 속에서 중국 역시 금융시장 개방 및 금융규제 완화의 속도를 늦추는 모습을 보이면서 미국과의 갈등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예를 들어 중국 내 외국계 은행이 직면한 가장 큰 어려움은 2013년까지 예금과 대출의 비율을 75%까지 낮추어야 한다는 규제이다. 중국정부는 WTO 가입 유예기간이 끝나고 외국계 은행에 대해서 중국 은행업을 전면적으로 개방한 2006년 외자은행관리조례(外資銀行管理條例)를 발표하였다. 이 조례에서는 외국계 은행이 자유롭게 중국에 법인을 설립하여 위안화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건으로 예대비율 75%를 중국계 은행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중국 내에서 위안화 예금을 100만급 확보해야 그 중 75만급을 위안화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제약조건을 부과한 것이다. 외국계 은행으로서 중국에서 예금을 확보하는 것 보다는 유동성이 풍부한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자금조달 비용측면에서 훨씬 유리한데, 이러한 제약조건은 외국계 은행의 영업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되는 것이다.

중국내 점포 확대의 제약 등으로 단기간 내 중국내 예금 확대가 어려운 외국계 은행법인에게 예대비율 규제는 영업활동에 매우 치명적인 제약조건이다. 사실 외국계 은행으로서 중국 내에서 중국인 고객에게 예금을 확보하는 것 보다는 유동성이 풍부한 해외에서 저리(低利)의 자금을 조달



하는 것이 비용측면에서 훨씬 유리하다. 이러한 사정으로 2006년 당시 예대비율 규제가 도입되었을 때 외국계 은행들은 예대비율 적용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예대비율 75% 적용을 2011년 12월 31까지 유예하였다. 하지만 당시 대부분의 외국계 은행들의 예대비율은 150% 이상이었고, 2009년 말에도 외국계 은행들의 예대비율은 100% 이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예대비율을 75%까지 축소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일부 외국계 은행들은 중국 정부가 결국 유예기간을 연장하거나 예대비율을 100%로 상향조정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하였다(관계자 인터뷰).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에 대한 규제감독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외국계 은행에 대한 예대비율 규제적용 시기를 연장하거나 예대비율을 상향조정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지고 말았다. 이에 따라 최근 외국계 은행들은 적극적으로 예금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기존 대출의 회수 등으로 대출규모를 축소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예대비율 적용에 대비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2009년의 외국계 은행들의 위안화 대출 축소 현상을 이런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스탠더드 차타드 은행의 관계자는 인터뷰를 통해서 외국계 은행들이 최근에 중국내 영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예대비율 압력 때문에 대출을 통한 영업 확대전략이 아니라 고객 사은품 증정 등의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한 예금 확보에 주력할 수 밖에 없는 현실적인 고충을 얘기하고 있다(〈南方都市報〉 2010/1/8). 더구나 중국내 이자율 정책의 자유화가 부분적으로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기준 금리에서 일정한 한도 내에서만 결정할 수 있는 제한이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계 은행들이 고금리 특판 예금 등을 통해 단기간에 대규모 예금을 확보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보험시장의 규제도 강화되었는데 외국계 보험사의 주력판매 상품인 변액보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다. 2009년 3월 보험회사의 주식시장 투자 통로인 변액보험의 회계준칙을 변경하여 변액보험을 특별회계로 처리하면서 사실상 변액보험을 상당히 규제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규제환경의 변화 속에서 금융위기 이후 중국내 외국계 은행의 시장점유율은 수년간의 상승 이후 처음으로 하락하였다. 2007년 2.38%에서 2008년 2.16%로 하락하였다. 보험 분야에서도 금융위기 이후 외국계 보험사들의 중국 진출이 둔화되었다. 외국계 생보사의 중국내 시장 점유율은 2008년 시장점유율은 전년대비 절반인 4.9%로 급감하였다.

[표5] 중국내 외국계 은행의 비중 추이

	외자은행총자산(억위안)	비중(%)
2003	4160	1.5
2004	5160	1.84
2005	6353	1.91
2006	9279	2.11
2007	12525	2.38
2008	13448	2.16
2009	13492	1.71
2010	17423	1.85

자료 : 중국은행감독위원회



[표6] 외국계 생보사 시장점유율 추이

	2002	2003	2004	2006	2007	2008	2009	2010
외국계 M/S(%)	1.8	2.8	2.6	5.8	7.9	4.9	5.2	5.6
외국계 수보(억위안)	40	86	84	240	396	361	426	591
외국계 증가율(%)	43%	115%	-3%	94%	65%	-9%	18%	39%
외국 생보사 수 (개)	10	16	19	25	24	26	28	28

자료 : 중국보험감독위원회

금융위기 이후 중국 금융정책의 또 다른 특징적인 변화는 외국자본 유치를 통한 중국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기존 정책이 중국 금융사의 해외진출(走出去) 확대라는 정책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다(聞丘春·梁悅敏 2010). 금융분야의 해외직접투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두드러지게 급증하기 시작한 분야이다. 중국통계연감에 따르면 중국 금융업의 해외직접투자는 2006년 이후에 체계적으로 집계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2005년 이전에는 금융업 해외직접투자가 미미하였음을 의미한다.<sup>17</sup> 중국 금융업의 해외직접투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에는 17억 달러였으나 2008년에는 140억 달러로 8배 이상 급증하였고, 2009년에도 87억 달러에 달했다. 전체 중국의 해외직접투자에서 금융분야의 해외직접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8년에는 25%, 2009년에는 15%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중국 금융사의 해외진출 확대는 중국 위안화 절상 압력을 낮추고 선진국에 대한 투자 확대는 선진국 경제 회복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티모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은 앞으로 중국의 대미 직접투자가 크게 늘어날 것이며 이는 중국과 미국 모두에게 좋은 일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Bloomberg May/11/2011).

[표7]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추이(Flow): (단위 억 달러)

	중국 해외직접투자	그중 금융분야 해외직접투자	중국 해외직접투자 (WIR)	중국 FDI 유입
2002	27.0	n.a	25.2	527.43
2003	28.5	n.a	18.0	535.05
2004	55.0	0	18.1	606.30
2005	122.6	0	113.1	603.25
2006	211.6	35.3	211.6	630.21
2007	265.1	16.7	224.7	747.68
2008	559.1	140.5	521.5	923.95
2009	565.3	87.3	480.0	900.33
2010	868.1	86.3	-	1057.35

자료 : 중국통계연감; 세계투자보고서(World Investment Report: WIR, UNCTAD)



### 3. 위기 진정 이후 중국 금융규제의 완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융위기 직후 중국 정부의 금융규제 강화와 개방속도의 둔화, 그리고 중국 금융사의 해외진출 확대는 외국계 금융사의 중국 금융시장 진출에 많은 어려움을 가져다 주었다. 이에 따라 미국 등 선진국은 중국 정부와의 경제분야 협상과정에서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여 중국 금융시장 진출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규제완화와 시장개방 확대를 꾸준히 요구하였다.

2011년 5월에 열린 <미중 전략경제대화>에서는 이러한 중국과 미국의 입장을 살펴보기에 좋은 사례이다. 이 회담에서 중국정부는 미국 금융사에게 보다 많은 시장 개방을 약속하였다. 금융분야에 대한 개방을 확대하여 뮤추얼 펀드나 자동차보험 판매<sup>18</sup>를 확대하고 회사채 발행이 가능하도록 중국 정부가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압력을 행사해온 위안화 절상에 대해서는 중국정부는 방향성에는 동의하나 그 속도에는 이견이 있다는 시각차를 드러냈다(<한국경제> 2011/5/11).

이 외에도 중국정부는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꾸준히 요구해왔던 다양한 규제완화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예를 들면 공매도 제도와 신용거래의 허용 등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도입 속도가 늦춰졌으나 위기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규제 완화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또한 은행이나 자산운용분야에서의 신규 외국계 법인의 설립이나 지점 확대도 최근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중국정부가 미국 등 선진국의 위안화 절상 압력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자국의 금융시장 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중국정부의 금융시장 규제완화는 향후에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 IV. 결론 및 전망

지금까지 이 글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 금융분야를 중심으로 중국과 미국의 경제관계 변화를 거시금융과 미시금융 분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융위기 직후 위기극복이라는 공동의 과제 하에서 확장적 금융정책과 내수부양이 중시되면서 중국 측의 협력이 필요해졌고, 미국은 위안화 환율 절상이나 중국 금융시장 개방이라는 측면에서 유화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중국정부는 전세계적인 내수부양 정책에 동의하면서 위안화 절상을 잠정적으로 중지하였고 금융시장의 개방과 규제완화 속도도 상당히 늦추었다.

하지만 금융위기가 어느 정도 진정된 2009년 하반기 이후 미국은 거시금융 분야에서의 위안화 절상과 미시금융 분야에서의 금융규제 완화와 시장개방을 중국정부에게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중국 정부는 위안화 절상 문제에 대해서는 점진적인 절상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미국과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금융시장 개방과 규제완화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금융분야에서 중국과 미국의 경제관계를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 일부 언론에서 말하듯이 위안화 문제를 둘러싼 양국의 갈등이 환율전쟁으로 확대되면서 세계경제는 더욱 불안해질 것인가? 서론에서 지적하였듯이 미국과 중국의 경제관계를 전망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양국이 모두 파국으로 전개되는 것 보다는 서로가 협력과 양보를 통해 보다 나은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향후 양국의 금융분야에서의 변화 방향성을 조심스럽게 전망하고자 한다.





중국정부에게 경제성장의 지속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과제이다. 이미 중국내 임금인상과 점진적인 위안화 절상으로 중국 내 많은 수출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실업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폭적인 위안화 절상은 중국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되기 때문이다. 중국정부는 위안화를 점진적으로 절상하는 대신 금융시장 개방 확대 및 규제완화를 양보하는 정책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미국정부는 표면적으로 위안화 절상을 가장 중요한 이슈로 제시하고 있으나 위안화 절상 문제로 중국정부를 지속적으로 압박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진출 금융시장 진출 확대나 중국 금융업의 해외진출 확대 등의 실질적인 이득을 취하는 정책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도 미국은 경제 금융 분야에서 중국과 전면적인 대립관계를 형성할 경우 미국이 가진 약점이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미국은 지난 수년간의 경기부양 정책에도 불구하고 더블딥 우려 등 경기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추가적인 경기부양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국에게는 미국과 중국의 환율문제를 둘러싼 대립이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변화되고 있는 국제 금융질서의 변화 (예를 들면 위안화 무역결제 확대나 중국 금융산업의 해외진출 확대 등)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향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 금융시장의 개방에 대비하여 국내 금융사의 중국 진출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 주(註)

- <sup>1</sup> 중국정부는 당시 달러당 공식 위안화 환율을 5.76위안에서 8.62위안으로 대폭 평가절하하였고, 이후 10여년간 달러당 8위안대의 사실상 달러 고정환율을 유지하였다.
- <sup>2</sup> 수출의 성장 기여도는 2000년 12.5%, 2005년 23.1%, 2006년 16.1%, 2007년 18.1% 등으로 높게 나타났다.
- <sup>3</sup> 글로벌 금융위기와 이의 전염효과로 전 세계 경제는 2008년 4/4분기 -5%의 대폭적인 경기침체를 경험하였고, 2009년에도 미국(-2.4%),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4%), 일본(-5%), 영국(-5%), 캐나다(-2.6%) 등 주요 선진국의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를 지속하였다. 또한 2009년 동유럽 신흥시장 위기, 미국 상업은행 위기 등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주었고, 2010년에도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는 EU와 전세계 경제에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 <sup>4</sup> 2009년 중국의 수출은 전년 대비 16.0%가 감소하였다.
- <sup>5</sup> 글로벌 경제위기 발발 전 미국 국채는 안전하지만 금리는 낮은 상품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상당히 낮은 금리로 중국은 미국의 막대한 경상수지 적자를 보전하여 왔고, 2002년에서부터 2007년까지 미국의 소비 붐, 자산시장 버블을 야기한 요인이었다(이장규 외 2010).
- <sup>6</sup> 중국 정부는 2008년 11월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의 14%에 달하는 4조 위안에 달하는 재정투자를 발표하였다.
- <sup>7</sup> 중국의 M2 증가율은 2006년과 2007년 각각 16%와 17% 수준이었다가 2008년 18%, 2009년 28%, 2010년 19%로 상승하였다. 2009년 말 은행업 대출 총액은 42조6천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33%가 증가하였다. 2009년 한해에만 신규 대출총액이 10조5000억 위안에 달한다. 이는 2008년 신규 대출 증가액의 2배가 넘는 대출 증가액이다. 2010년에도 신규 대출 증가 속도는 2009년에 비해 다소 둔화되었지만 여전히 빠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2010년에도 8월까지 신규대출은 이미 5조 9,000억이 증가하였다(중국인민은행).
- <sup>8</sup> 2009년 7월에 열린 <미중 전략경제대화>에서는 양국의 갈등 완화를 위해 위안화 절상 등 환율문제, 미 달러화의 기축통화 지위문제, 중국의 인권 문제 등 현안들은 비켜가는 실용주의적 외교의 모습을 보여주었다(<중앙일보> 2009/7/29).
- <sup>9</sup> 물론 중국이 미국 국채의 보유를 축소하는 것은 대량으로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미국 국채 수익률이 하락하면서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의 시장가치가 떨어지고, 달러 대비 위안화가 절상되면서 중국의 달러 표시 해외자산 손실이 우려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는 하다. 하지만 중국이 미국 국채 매입의 축소를 미국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기도 하다.



- <sup>10</sup> 최근 중국은 위안화 무역결제로 국외에서 조성된 위안화를 중국내에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는 자본시장 개방이 전제되어 있지 않은 위안화 국제화 추진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고,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 <sup>11</sup> 위안화 국제화는 3가지 단계로 추진될 수 있다. 첫째는 주변국가에 결제통화로 사용이 확대되는 단계, 둘째는 유럽에서의 유로화와 같이 특정 지역에서 위안화가 사용되는 지역 통화화 단계, 셋째는 다른 기축통화처럼 국제 준비통화로서 사용되는 국제통화화 단계이다(안유화 2011).
- <sup>12</sup> 중국은 2010년 이후 이자율을 높이고 통화팽창을 억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sup>13</sup> 중국은 2011년 11월 30일 지급준비율을 낮춤으로서 기존의 긴축정책에서 다소 완화된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이는 국내 물가가 안정화되고 있고, 유럽 재정위기의 확산으로 내수 소비 확대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기인하였다. 동시에 미국 역시 유럽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달러 공급을 확대하면서 세계 경제의 위기극복을 위한 양국의 정책 방향성이 일치하는 모습을 보였다.
- <sup>14</sup> 중국의 WTO 가입 당시 중국 금융분야는 매우 낙후되었고 취약했다. 중국 금융분야는 대외적으로 중국의 금융부문이 해외 금융자본과의 경쟁에서 격리되어 보호되어 왔고, 대내적으로 정부의 산업정책을 지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용되면서 정책개입과 과도한 규제가 지속되어 금융산업의 발전을 저해하였기 때문이다. 또 은행이 부실한 국유기업에 대한 지원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은행의 부실채권 문제가 심각하였다. 금융산업이 지나치게 은행산업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자본시장의 발전이 제약된 기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문제점도 심각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은 WTO 가입 후 금융시장 개방을 단계적으로 허용하였다. 2001년 12월 중국의 WTO 가입 당시 중국정부는 단계적인 금융시장 개방계획을 약속하였고 비교적 충실하게 이를 이행하였다. 2006년 12월 개방 유예기간이 완료되면서 중국은 사실상 전면적인 금융시장 개방시대에 진입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내 영업지역, 위안화업무, 지점설립 등에 대한 개방은 완료되었다. 하지만 금융업종별로 개방 정도의 차이는 존재하였다. 은행과 손해보험사의 경우 외국은행 100% 단독지분 현지법인 설립이 허용되지만, 생명보험사는 50%지분, 증권사는 33%지분, 자산운용사는 49%지분의 합작법인만 설립이 허용된다. 기존 중국계 금융사에 대한 지분인수는 일반적으로 25%로 제한되고 있다(양평섭 외 2007).
- <sup>15</sup> 영국은 1986년 빅뱅을 통한 증권산업 규제 완화, 1999년 미국도 금융서비스현대화법안(Gramm-Leach-Bliley Act: GLB)을 도입하면서 규제완화를 빠르게 추진하였다.
- <sup>16</sup> 미국은 2009년 6월 금융규제개혁방안(Financial Regulatory Reform)을 발표하고 2010년 1월에는 상업은행의 투자업무를 금지하는 볼커룰(Volcker Rule)을 제안하는 등의 규제가 추가되었다. 영국은 2009년 3월 금융분야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터너리뷰(Turner Review)를 발표하였고, EU도 은행 자기자본 지침 수정안을 발표하였다(박현수 외 2010).



---

<sup>17</sup> 예를 들면 2005년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금액은 122.6억 달러인데, 금융업을 제외한 항목별 해외직접투자 금액(통계연감 18-21항목)의 합이 122.6억 달러로 일치한다. 이는 금융업의 해외직접투자가 없었음을 의미한다. 2004년에도 통계연감의 금융업을 제외한 항목별 해외직접투자 금액의 합이 전체 해외직접투자 금액의 합과 일치한다.

<sup>18</sup> 자동차 보험은 지금까지 외국계 보험사에게 책임보험이 개방되지 않았으나 향후 이를 외국계 보험사에 개방한다는 것이며, 이는 보험시장 개방의 가장 큰 걸림돌이 제거된다는 것이다. 자동차 보험시장의 개방에 대해서 8월 중국 보감위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초안을 마련하여 국무원에 상정한 단계에까지 이르렀다.



## 참고문헌

---

- 박현수·양오석. 2010. “금융위기 이후의 글로벌 금융규제.” 〈삼성경제연구소 Issue Paper〉, 7월 8일.
- 안유화. 2011. “위안화 국제화 현황과 전망 및 향후 추진방향.” 〈자본시장 연구원, 중국금융시장포커스〉, 7월.
- 양평섭·구은아. 2007. 《중국의 WTO 가입 5주년 결산》.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장규·나수엽·여지나·박민숙. 2010.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한 중국의 대응과 미-중 경제관계.” 〈KIEP 연구보고서 10-11〉.
- 스타인펠드, 에드워드. 2011. 《왜 중국은 서구를 위협할 수 없나》. 파주: 글항아리.
- 조종화·박복영·박영준·양다영. 2010. “중국의 외환정책과 국제통화질서: 위안화의 절상과 국제화를 중심으로.” 〈KIEP 연구보고서 10-09〉.
- 〈한국경제〉. 2011. “美 "중자본시장 개방" 요구...中 "투자장벽이나 낮춰라." 5월 11일: 12.
- 한국은행. 2010. “위안화의 국제화 추진 현황과 과제.” 〈해외경제정보〉 제2010-43호.
- China Knowledge Press. 2005. *Financial Services in China*. Singapore: China Knowledge Press Private Limited.
- 丁承. 2008. “中資銀行海外戰略擴張初探.” 〈新金融〉 1.
- 周小川. 2009. “關於改革國際貨幣體系的思考.” 中國人民銀行, 3月23日.
- 肖鋼. 2010. “後危機時代我國銀行業走出去戰略” 〈中國金融〉 20.
- 吳洁. 2010. “次貸危机后我國銀行業海外業務發展策略研究.” 〈海南 融〉 4.
- 許瀚文. 2010. “次貸危机后我國銀行業海外業務發展策略研究.” 〈海南金融〉 4.
- 聞丘春·梁悅敏. 2010. “中資銀行海外拓展戰略的實例研究.” 〈中國貨幣市場〉 8.
- 謝臻·魏剛·李鋼. 2010. “中資銀行海外經營組織形式的選擇問題.” 〈對外經貿實務〉 1: 28-31.
- Bloomberg. 2011. May 11.
- 〈南方都市報〉. 2010. 1月8日.
- 中國統計 鑒 등



## 필자약력

서봉교(徐逢敎) 동덕여자대학교 중어중국학과 교수(중국경제, 중국금융 담당).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삼성금융연구소 해외사업연구팀 수석연구원(중국금융 담당), LG 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중국 경제 담당)을 역임하였다.

## 보다 나은 세상을 향한 지식 네트워크

---

- 동아시아연구원(EAI)은 미국 맥아더재단(MacArthur Foundation)의 ‘아시아안보이니셔티브’(Asia Security Initiative) 프로그램 핵심 연구기관으로 선정되어 재정지원을 받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 안보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 및 정책 개발을 위해 2009년1월 아시아안보연구센터(소장: 전재성 서울대)를 설립하였습니다.
- 본 연구 보고서는 EAI 중국연구패널의 연구 결과물로서 정책결정 및 학술연구, 각종 교육사업에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본 보고서 내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인용할 시에는 출처와 저자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보고서는 동아시아연구원 홈페이지 [EAI 출판]과 각 프로젝트 페이지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문의는 아래로 연락해 주십시오.  
김하정 아시아안보센터 외교안보팀장 Tel. 02 2277 1683 (내선 107) [hjkim@eai.or.kr](mailto:hjkim@eai.or.kr)



